

野 “국민 무시” vs 與 “적반하장”...김오수 단독 채택 공방

국힘 “與, 인사청문 속개 요구 무시...독재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 보여줘” 민주 “野, 인사청문회 파행 장본인 ‘적반하장’...검찰총장 공백 방치 안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오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

제(30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김학

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진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에 우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인·유포터스 사건 관련 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중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정권

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이 청문회 재개를 주장하며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흡집 내기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다가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의혹들이 해소되자, 능력과 자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도적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검찰총장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33번째 청문회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고,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책임자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준석 39.8% vs 나경원 17.0%...野 지지층 50% ‘이준석’

이준석, TK·PK서도 강세...男, 48.1%가 지지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도를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5월 31일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선호도는 50.1%로 과반을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8~29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질문한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39.8%의 지지를 확보했다. 나 전 의원은 17.0%, 주호영 의원은 3.4%를 각각 기록했다. 홍문표 의원은 3.2%, 조정래 의원은 2.4%로 뒤를 이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6.2%로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50.1%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나 전 의원은 29.5%로 이 전 최고위

원의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5.2%, 홍 의원은 2.8%, 조 의원은 2.4%를 각각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을 한 이들이 7%로 대폭 줄며 나 전 의원, 주 의원 등의 지지도가 상승한 모습이다. 그러나 홍 의원과 조 의원의 적합도 수준은 지지층 사이에서 오히려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45.3%, 나 전 의원이 17.9%, 주 의원이 1.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38.9%, 나 전 의원은 19.9%, 주 의원은 4.9%를,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39.5%, 나 전 의원은 15.5%, 주 의원은 3.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48.1%가 이 전 최고위원을, 16%가 나 전 의원을 지지했다. 여성은 31.7%가 이 전 최고위원이, 17.9%가 나 전 의원이 대표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기 여론조사 중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조국과 함께” vs “또 수렁” 與 회고록 논란...지도부 ‘함구’

송영길 대표 ‘곤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조국의 시간’ 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조국 회고록’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을 묻자 “당내에 그로 인한 이견과 분열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 회의 발언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앞으로 나올 텐데 서로 잘 들어보고 혹여 메시지가 나가기 한다면 잘 또 논의해 보고 협의해보자는 정도로 얘기했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최고 위 공개 자리에선 조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송 대표 취임 후 쇄신 일환으로 야심차게 진행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오는 2일 일 단락하는 가운데 하루 전인 1일 조 전 장관 회고록 출간 시점이 겹친 것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

지된다.

더욱이 민주당 내에선 벌써 ‘조국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한마디씩 보낸 데 이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시작된 양상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 출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권리”라면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났었던 일은 없었던 건지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소장과 조웅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 이후 14년 만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으로 당 내 경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아 활력이 만발한 반면, 우리 당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

뷰에서 “민주당이 조 전 장관으로 촉발된 공정 논란, 또 우리 사회의 공정 인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말 입시 바리 의혹에 대해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견디기 수용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그걸로 촉발된 여러 가지 논쟁과 쟁점들을 단락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반면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에 대한 언론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다. 조국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라며 한 여론 지지층의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했다.

이광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된다”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쪽에는 ‘검수완박’, 또 한쪽에서는 일부 ‘일단 공수처부터 안착하는 게 안 늦겠냐’라는 분들도 있다”면서 강한 양론을 모두 전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